

(통권 21-10호)

예산·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5)

2021. 6. 16.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페이지
I. 경제	1. 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	1
II. 재정	2. 탄소세 논의 동향	2
	3.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4
	4.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심	6
III. 정책	5.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현황과 방향	7
	6. 출산지원금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 : 충청남도 공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9
IV. 법률 제·개정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등11인) - 농어민, 서민의 인지세 면제 등	10

1. 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

- 우리 경제는 2021년에 수출이 개선되며 3.8% 성장한 후, 2022년에는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21년에 농축수산물가격과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1.7%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 2022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폭이 1.1%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취업자 수는 2021년에 서비스업의 회복이 제한되면서 2020년 (-22만명)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소폭 반등(19만명)하는 데 그친 뒤,
 - 2022년에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33만명 증가할 전망

출처 : KDI(경제전망상반기021.5)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용량 관계로)

https://www.kdi.re.kr/forecast/forecasts_outlook.jsp

2. 탄소세 논의 동향

-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탄소세 등 시장기반적 정책 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공조 확대
 - 지구온난화에 따른 당뇨병 증가, 기상변화에 따른 곡물 작황 감소 및 가격 상승, 물 부족 현상 심화, 희귀생물의 멸종 위기 등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 가시화
 -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 상승폭을 1.5°C로 제한하려는 목표를 제시, 이후 탄소중립 목표
-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 산림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순배출량 '0'
 -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외에도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CCUS 기술 개발

표 1 탄소가격제의 5가지 유형

구분	정의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하여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배출허용량을 설정하여 배출권을 할당하고,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Crediting Mechanism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경우, 해당 감축분을 제3자의 검증을 통해 Credit으로 인정하고, Credit을 온실가스 배출 수요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Results Based Climate Finance	사전에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제3자 검증 필요)할 경우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탄소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Internal Carbon Pricing	정부나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탄소 사용과 관련한 비용을 설정 및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 중, 에너지 관련 세제는 운영 중이나, 탄소배출량에 대해 과세하는 탄소세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

표 2 탄소세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처리현황)	주요내용
제19대국회	
기후정의세법안 (박원석의원, 2011.3.6.28, 임기만료폐기)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원자력 발전소 비중의 단계적 축소를 위하여 기후정의세 도입
탄소세법안 (심상정의의원, 2013.7.10, 임기만료폐기)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성이 높은 과세대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부과
제21대국회	
탄소세법안 (옹혜인의원, 2021.3.12.,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를 위하여 과세물품의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을 기준으로 탄소세 부과 후 해당 세입을 탄소세배당의 형태로 균등지급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과 연계)

- 각국의 탄소세 시행 및 논의 사례는 탄소세 도입 시 급격한 세 부담 증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 시사
 - 또한, 탄소세 도입 시 현행 에너지세제와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탄소 다배출업종의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 역진성 문제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검토 필요

[참고] 탄소국경세 도입 시 한국의 주요 수출업종에 미칠 영향

- 탄소국경세가 EU·미국을 중심으로 시행될 가능성 가시화
-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정책수단이 시행되는 관할 지역을 넘어서는 파급효과
- 탄소국경세는 탄소중립 달성 외에도 역내 물품에 높은 환경 규제를 적용함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가 초래하는 역차별 방지
- EU 의회의 환경위원회는 늦어도 2023년까지는 탄소국경세를 도입 주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국경세 시행 공약 제시

출처 : 국회예정처(추계&세제이슈 제15호, 2021.5)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3.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
 - 지방자치단체 무리한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중앙의회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중앙정부 산하 독점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등 중앙정부가 신규 지방투자사업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
 -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는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과 관리 능력을 저하시킬 우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전액 지자체 재원 사업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여 사업일정 지연 및 업무 부담 증가
 - 자치단체 재정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자심사제도는 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직접 통제
 - 특히 국비 지원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주민센터와 주차장, 도서관 및 복지시설과 같은 지역의 소규모 사업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하고 조사를 담당하는 실정
 - 이러한 제도 운영은 적기준공이 중요한 신규 지역개발사업 일정 지연은 물론 업무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를 퇴색

-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심사 체계를 개선 필요
 -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심사제도로 2019년 기준 약8조원 가량의 시비 투자여부를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하여 결정
 - 뿐만 아니라 2020년 한 해에만 서울시 미래를 결정하게 될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19건, 총사업비 4.4조 원)를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하는 시의 지정기관이 아닌, 총사업비 중 고작 0.1%를 부담하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 독점하여 수행
 - 이러한 제도 운영은 단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 기회를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약화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
- 지자체 예산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심사하고 책임질 필요
 - 투자사업을 직접통제하려는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심사제도 개선
 - 지방투자심사제도를 비롯한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자치분권 또는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심사와 조사의 주체를 단순히 투자 규모나 분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출처 :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2021.3)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4.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중심)

- 정부 간 재정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정책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에 따른 세입축소,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증가에 따른 세출확대가 지방정부 예산대비 부채비율과 차년도 자체사업비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21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6개년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세입감소가 차년도 자체사업 예산 축소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증가에 따른 세출확대가 예산대비 부채비율을 높이고 자체사업 예산 감소
 - 지방교부세 비율, 인구밀도, 노년층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예산대비 부채비율 영향요인으로 확인
 - 지방교부세 비율, 국고보조금 비율, 노년층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차년도 자체사업비율 영향요인
 - 중앙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활용할 경우 이를 충분히 보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세 지출제도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결과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출처 : 서울연구원(서울도시연구 제21권 제4호) 원문 e-mail 첨부

5.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현황과 방향

-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치공동체)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보편성)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 기본소득 도입배경으로 사회 양극화의 심화, 선별복지의 한계, 일자리 감소, 인권 의식의 확대 등
 - 기본소득의 5대 원칙으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등이 있음
 - 전국민 기본소득 적정액수(연간)는 충남도민 10명 중 5명은 30만~50만원
-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찬반 이유
 - 찬성의 가장 큰이유로 소득 불안감 해소와 경제 활성화 도모
 -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국가 재정 부담과 근로 의욕 감소
- 행복키움수당 추진현황
 - 소득수준 무관 만 36개월 미만 아기, 1명당 10만 원, 2018년 11월부터 매월 20일
 - 제도적 특징으로 도내 모든 아동이 지원대상, 다른 지원 받아도 중복 수급 가능, 12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 충남도민 만족도 조사: 도민 10명 중 8명 '경제적 도움' 응답
 - 지원 현황 및 계획: 2021년 4만 3,545명, 총 518억 원 지원
- 농어민수당 추진현황
 - 제도적 특징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상, 전국 최고액 지급, (지역화폐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 지급방법 : 종이상품권(1,023억), 모바일(7억), 카드형(290억)

농어민수당 추진 현황

<p>추진방식</p>	<p>지원 대상</p>	<p>사업량</p>	<p>지급방식</p>
<p>농업환경실천사업 폐지, 2020년부터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시행</p>	<p>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임가, 어가</p>	<p>16만 5,000가구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p>	<p>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시행 현금 또는 지역화폐</p>

○ 청년수당 추진현황

- 최근 5년간 충남 전체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 인구는 지속 감소, 청년 고용률, 실업률 등 청년고용상황도 악화 추세
- 충청남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시범운영)
- 청년진흥펀드 설립 검토 :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예산, 지역 금융을 통한 기금 편딩, 충청남도 산하 중간 조직의 사업예산, 도내 기업 편딩 등을 고려
- 청년수당 추진 검토: 청년 자산형성 기회 제공, 금융기관과 연계해 청년 희망통장 등에 당사자와 충청도가 매월 일정 금액(10만~20만 원)을 똑같이 저축하는 방식

○ ‘충남형 기본소득’ 정책 제언

- 기본소득: 정치권 주요의제인 만큼 공론화와 사전검토 필요
- 행복키움수당: 도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더욱 확대방안 필요
- 농어민수당: 지급액 상향과 농·어민 개별 지급방식 검토 필요
- 청년수당: 시·군 먼저 도입 후 충청남도 차원의 도입 필요

출처 : 충남연구원(충남정책지도, 2021.5)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6. 출산지원금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 (충청남도 공주시 사례 중심)

- 최근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 대표적인 지역인구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는 출산지원금이 지역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증가를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검토 필요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주시를 사례로 하여 출산지원금의 자연적, 사회적 증가에 영향 분석
- 2018년부터 양적 수준이 더욱 증가한 공주시 첫째아 출산지원금 효과를 2018-2019년의 기간 동안 분석한 결과,
 - 첫째아 출산지원금은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인구 대비 첫째아 출산 비율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20-30대 유입인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 출산지원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 제시
 - 지역인구 구조 및 인구 규모의 변화가 보다 정교하게 관측 필요
 - 인구변화를 관측하는 다양한 결과지표가 정책평가 시 고려 필요
 - 무분별한 지원 내지는 지자체 간 경쟁적 지원이 아닌 지역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
 - 지속적인 정책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 차원의 정책 추진과 충청남도의 정책관리 및 조율이 병행되어야 하고,
 -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 등이 병행 필요
 - 현재 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인구 정책과의 결합 추진도 인구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 모색

출처 : 충남연구원(충남연구 통권7호, 2021.4) 원문은 e-mail 첨부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등11인)

○ 주요내용

- 현행법은 농어민·서민이 조합법인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및 농업인의 예금·적금증서·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악화 및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농어민·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수협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에 따라 농어민 권익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 이에 2021년말로 도래하는 농어민·서민의 용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와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

출처 : 국회의안시스템

원문은 e-mail에 첨부함